

2023년도 부평소방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2023. 11.



INCHEON FIRE DEPARTMENT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2023년 부평소방서 종합감사 처분요구

□ 총괄 현황

[단위 : 건, 천원, 명]

총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기관 경고
	소계	시정	주의	권고	소계	회수	환급	기타	소계	징계	경고	주의	
29	23	13	9	1	4 (1,850)	2 (356)	2 (1,493)	-	2	-	-	2 (2명)	-

[일련번호 1]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신규임용자 및 보직변경자 실무적응훈련 소홀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직장훈련계획) 제3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 훈련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수립¹⁾한 「2023년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또는 보직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부서 상급자(담당업무 경험자)를 지도관으로 지정하여 당해 부서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하기 위한 실무적응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감사 수감 기간 신규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시 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2023년 부평소방서 직장교육 훈련계획에 따라 신규 임용자 및 보직변경자 실무적응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830(2023. 1. 18.)호

[일련번호 2]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호봉 확정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확정) 제2항 단서 조항에는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호봉을 재확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호봉 재확정 시기는 복직일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부평소방서 복직자 총 18명(21년 1명, 22년 3명, 23년 14명)의 호봉 내역을 확인한 바, 육아휴직자 소방○ ○○○에 대해 휴직기간을 산입한 호봉 재확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시 정] 육아휴직 복직자 소방○ ○○○에 대해 호봉 재확정 및 근무년수 정정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을 소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지침)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호봉 확정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공가 및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 시간, 출퇴근, 유연 근무, 당직, 휴가²⁾ 및 출장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그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의 (10)가족돌봄휴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³⁾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평소방서 행정팀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가 사용 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사용하였는지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복무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유급 가족 돌봄휴가 승인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소방서 공가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한 바, 감사 수감일 현재까지 현행 공가 사용에 따른 현행증서 27건과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6건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10)가족돌봄휴가의 (나)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휴가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가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확인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외부강의 미신고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소방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동 법률 및 강령에서 정하는 금액⁴⁾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강령 제20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참조]

[표] 소방기관 외부강의 등 신고 방법

강의횟수	월 3회 이하	월 3회 초과 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센터 직원 → 센터장 내부결재 ▶ 안전센터장 → 소방서장 내부결재 ▶ 소방서 팀·과장 → 소방서장 내부결재 	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승인 요청 ② 승인 통보 이후 내부결재
	↳ 그 외 소방서 직원 : 부서장(과장)	

4)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별표2]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1시간당 40만원

5)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 제한)

②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월 3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 포함) 행동강령책임관 : 소방감사담당관]

아울러, 동 강령 제2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사립학교, 국립대학교(법인) 등이 요청자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⁶⁾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부평소방서 외부강의 총 14회(21년 3회, 22년 10회, 23년 1회)의 신고 내역을 확인한 바, 소방○ ○○○, 소방○ ○○○은 ○○○○○○○○○ 공단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면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출강 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 등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향후 외부강의 시 미신고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외부강의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관련자)

부평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부평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6) 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6117(2022. 7. 5)호 「외부강의 신고·승인업무 처리요령」

[일련번호 5]

인천소방본부

권고(개선) 요구

제 목 청사관리인부(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인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후생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사 관리인부⁷⁾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취업 규칙으로써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이하 ‘복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무원 등 근로자의 처우를 증진하고 노무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복무지침」 제2조(정의)에 따르면 ‘소속부서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명령하여 노무를 제공받고,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근무부서를 말하며, 제4조(성실의무)에서는 근로자는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9조(금지사항)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근무상황관리)에서는 ‘근로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의 근무상황부에 출근 및 퇴근 여부를 등록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청사관리 및 청소

이에 부평소방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이행 여부 및 출·퇴근, 근무상황부 등의 복무사항을 확인한 바,

부평소방서와 기간제 근로자는 본서를 포함하여 부평119안전센터 등⁸⁾ 6개소의 소방청사 건물을 순회하며(근로시간 09:00~18:00) **환경미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하였다.(근로·휴게시간, 휴일, 임금, 연차휴가, 근로자 준수사항 등 포함)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순회 근무 일정은 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매월 근무 일정표를 작성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공문서로 시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메시지(문자, 카카오톡)로 근무 일정표를 전달하여 운영하며,

기간제 근무자의 순회 근무지에서는 기간제 근무자가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상황부에 기록하여 해당 센터장(팀장)에게 보고(수기)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감독에 대해서는 담당자 지정, 수행업무의 세부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또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안전센터의 특성상 부정기적인 순회 근무를 실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이전 근무 날짜의 비교, 근무일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휴가 등의 근무 일정표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근무 일정표가 정한 근무지가 아닌 다른 소방청사 건물에서 근무를 실시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이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령의 관리책임 강화에 따라 근로자 보호 및 효율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감독사항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8) 본서(○○, ○○○), ○○, ○○, ○○, ○○, ○○119안전센터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은

[권고(개선)] 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감독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수행업무의 세부 감독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시고,

②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안전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등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상황 확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령의 관리책임 강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간제 관리자 운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는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이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하고, 실비 지급 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운임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도 여비를 1만원 또는 2만원의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시 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 90,000원을 회수 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7]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급량비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의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규칙·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인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평일과 휴일에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특근매식비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① 특근매식비 정산 시 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 객과적인 사실을 사전에 체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급량비(특근매식비)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행사운영비 집행 가능 경비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3. 행사운영비(201-03) 발채

또한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 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시상품을 구매하였으며,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위하여 제작한 행사 운영 물품을 해당 행사와 연관성 없는 업무에 참석한 대상자에게 기념품으로 배부하는 등 행사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주 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 제6호 ‘아’ 목에 따라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집행할 수 있다.

이때, 별표1 제6호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에서 명시하고 있다.

부평소방서의 수감 기간 내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확인한 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라 명절 직원 격려 물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구매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의 교육·감독과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인천소방본부

주의 요구

제 목 차량수리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부평소방서의 ○○○ ○○차 등 2대는 임무 수행 중 고장 발생으로 전문업체를 통하여 고장 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에 따르면 제1관서⁹⁾의 재무관¹⁰⁾은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¹¹⁾(소방서 소방행정과장)에게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제5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제1관서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과장에게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9)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

10) 재무관 : 관서의 장, 부소장·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회계담당 국장 또는 부장

11)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추 두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소방 차량의 고장 발생 수리를 위하여 전문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고장내역을 확인한 후,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 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지체없이 계약 절차에 따라 소방차량 고장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차량 업무 담당자와 수리업체 직원 간의 구두 계약만을 체결하였다.

이에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하나 물펌프·진공펌프·수리 부품 등 수리 관련 비용을 검토·조정하지 못하고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고장 소방 차량 중 ○○○ ○○차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고장 수리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여야 하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계약 체결시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발생시 장비의 수리 입고부터 출고시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수리가 되도록 지휘 감독과 소방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관리의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소홀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가. 준공검사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평소방서에서는 “○○○ 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 공사 건”에 대한 준공검사 통지를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접수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온나라)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을 위한 e호조 검사검수관리에서도 첨부 문서마다 준공검사 일자를 서로 상이하게 적시하여 첨부하는 등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인천소방본부

시정(회수·환급) 요구

제 목 주택용 소방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처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시설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2호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시장의 책무),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¹²⁾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 제2장(복무) 제3절(휴일·휴가·휴직) 제20조(휴일) 제1항에 따르면 ‘① 주휴일(일요일)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한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방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5월 1일) ④ 임시 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취약대상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계획 알림’¹³⁾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 시달’¹⁴⁾을 수립하여 화재안전취약대상(기

12)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③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13) 市 예방안전과-1735(2023. 2. 3.)호

14) 市 예방안전과-4739(2023. 3. 29.)호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관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기간제 근로자 월 급여 지급에 대하여 8월 근무일수 1일, 9월 근무일수 2일을 미산입하여 800,760원 미지급하였으며, 8월 주휴수당¹⁵⁾ 1주를 초과 산출하여 266,920원을 과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 할 사 항 부평소방서장(예 방 안전 과장)은

[시 정] 부적정하게 과지급된 급여 266,920원 회수 조치 및 미지급된 800,760원을 환급 조치 하시기 바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주휴수당 : 주5일 만근 시 토요일 유급휴가 부여(1일 기본급)

[일련번호 13]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제2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2023년 ○월 ○일 ○○○○○○○○○○○(주) 건물(부평구 ○○대로 ○○○)의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 물분무등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에 중급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초급 소방기술자로 배치된 신고서를 접수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시 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위반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에 의하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제1항에 의하면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2항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 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2023년 ○월 ○일, 2023년 ○월 ○일에 차량이 말소된 이동탱크 저장소 2대(○○어○○○○, ○○가○○○○)에 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용도폐지 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시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용도폐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인천소방본부

주의 요구

제 목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처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시설법」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① 동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② 동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③ 동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제4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신고 처리)에서는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사항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난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처리절차 시달¹⁶⁾」에서는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2일 이내 신고접수하고 현장 확인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에 실시하며 현장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6) 市 예방안전과-6307(2010. 5. 10.)호

그러나 감사 기간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고 190건을 확인한 바, 신고접수 지연 27건, 현장확인 지연 6건,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 개최 지연 11건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주 의]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에 의하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의하면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리 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인천시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운영 계획¹⁷⁾을 시달하여 교육실시(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3시간 이상)이후 교육이수자에 대해 해당 학교로 교육 이수번호를 발급하여 통보하고 있다.

17) 市 예방안전과-2786(2022. 2. 22.)호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2022년 ○월 ○일 ○○○○○중학교 병가 1명, 2022년 ○월 ○일 출장 1명 등 교육에 불참석한 교직원에게 대해 교육 이수 번호를 발급하여 각 해당 학교로 통보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시 정] 이수 번호를 발급받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적의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법령 위반업체 처분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¹⁸⁾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제1항에 따르면 ‘소방관계법령¹⁹⁾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평소방서는 2022. ○. ○. ○○○○○○협회로부터 관내 등록된 소방시설업체 “○○○○ 주식회사(대표자 ○○○)” 에 대한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알림을 접수하였고 세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18)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을 말한다.

19)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그러나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7일 초과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를 위반한 ○○○○○(주)에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후 과태료 부과 처분 사무를 담당하는 119재난대응과로 통보하여야 했으나,

○○○○○(주)이 2022년 ○월 ○일 소방시설업공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법령 위반사항을 임의로 종결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119재난대응과장)은

[시 정]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보고 및 과태
료 부과 처분 검토 등 적의 조치하시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퇴직(면직)자 개인보호장비 관리 소홀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내 용]

「소방장비관리법」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르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9조(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입력)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부평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수감 기관동안 퇴직 및 면직을 한 소속 직원 직원 16명 중 12명의 개인보호장비에 대하여 불용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주 의]

퇴직 및 면직한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관련 규정에 의거 불용심의 등을 실시하여 처리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내 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항에 의하면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도 등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수난구조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연 1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기본교육 18시간 이상,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표1] 연간 전문교육을 6시간 이상 미이수한 대원 5명과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기본교육 1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 1명, 총 6명에 대하여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해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주 의] 교육 및 훈련 참석기준 이수시간에 미달자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구급활동 후 발생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내 용]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그 세부 종류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1]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생략)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발췌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의료폐기물 관리(p55)에 따르면 ‘일반의료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환자를 이송한 의료기관에서 폐기한다. 또는 현장 응급처치 후 환자를 미이송 하거나, 의료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관리실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보관하고,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처치를 위하여 착용한 개인보호장비 또는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배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9구급대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한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전에 구급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배출과 위해 관할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위탁 처리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소방서의 의료폐기물 배출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바,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 이송 후 임의로 배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시 정]

조속한 시일 내에 관할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관리담당자가 소속 구급대원들이 올바르게 의료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감염병 질병 접촉 구급대원 인사 기록관리 소홀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내 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항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제21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구조·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이와 관련하여 부평소방서의 감염관리 업무를 확인한 바, 수감기간 내 소속 구급대원 중 감염병 질병 환자 및 유해물질 등과 접촉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러나 이중 2명(회)를 제외하고 1301명(회)의 접촉 보고서는 해당 직원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시 정]

감염성 질병 환자 및 유해물질 등 접촉한 구급대원의 접촉 보고서를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성 질병 환자 및 유해물질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적 관리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인 천 소 방 본 부

주의 요구

제 목 소방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감경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²⁰⁾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는 과태료를 정식 부과에 앞서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서 생략할 수 없으며, 질서행위규제법이 정한 방법 외의 수단으로 대체될 수 없고 비용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고지해서는 안된다.’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 p79)

‘의견제출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개별법상 감경 혹은 사회적 약자 감경과 중복하여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만료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가 가능하다.’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 p81)

20)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②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2항내지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²¹⁾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제3항에서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달리 부과(감경)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법 제16조제3항)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규정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 p83)

이때, 당사자가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스스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소방서의 수감기간 내(‘21. 10. ~ ‘23. 10.) 과태료 부과 및 감경 현황은 과태료 부과는 277건(226,900천원)이며 이 중 당사자가 자진 납부한 과태료는 181건(100,467천원)이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결정하여 감경한 과태료는 87건(38,339천원)이다.

그러나 감경 과태료 87건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제출 사항을 확인한 바, 87건 중 62건은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할 당시 적발 공무원인 예방안전과 직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 징구받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접수 등을 실시하지 않고 119재난대응과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면서 해당 의견제출서를 스캔하여 붙임 문서로 주거나 인편으로 전달 하였으며, 나머지 25건도 당사자의 의견제출서를 119재난대응과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공문서가 아닌 임의로 접수 처리하여 감경을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1) 질서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3호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119재난대응과장)은

[주 의]

예방안전과에서는 화재안전조사 및 위험물 검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과태료)을 적발 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업무를 처리 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방법 및 불복 제도(질서행위 규제법 제16, 제20조)를 안내하고, 과태료 감경을 구두 약속하거나 의견제출서를 대리로 접수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라며,

119재난대응과에서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확행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경심의위원회 개최(또는 현장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달리 부과(감경)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인 천 소 방 본 부

시정 요구

제 목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정비 관리 소홀

기 관 명 부평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5항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하며,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9화학대응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대상에 대한 화학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해 ‘2022년 화학사고대응 소방안전대책 시달(통보)²²⁾’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정비·보완 추진 계획(알림)²³⁾’ 을 수립하였으며 유해물질 취급 업체의 신규·폐업·취급품목·수량 등 변동사항을 매월 소방서별로 현행화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22) 市 119화학대응센터-2186(2022. 3. 7.)호

23) 市 119화학대응센터-2405(2022. 3. 14.)호

그러나 부평소방서에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대상 94개소 중 ○○○○○○○○○○ (○○동 소재, 과산화수소 등 21종), ○○○(○○동 소재, 수산화테크타메틸암모니움 등 2종)에 대해 환경청에서 허가받은 취급 품목과 불일치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정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평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시 정] 환경청 허가 대상과 불일치한 ○○○○○○○○○○ 등 2개소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정비·보완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